



여론브리핑 제71호 (2010.3.7)

EAI · 한국리서치 기획 <세종시 여론조사 특집>

세종시 이슈의 특징과 국민여론의 양면성

대표집필 : 이내영 · 정한울

EAI 동아시아연구원 · 한국리서치 공동 매월 정기 조사

EAI 여론분석센터(소장 이내영 고려대)와 중앙선데이, 한국리서치(대표 노익상)는 2009년 2월부터 매달 유권자들의 정치사회인식의 분포와 변화를 추적하는 정기 여론바로미터 조사를 실시한다. 민주적 거버넌스 체제에서 국민들의 의사와 선호를 정책결정에 반영하고 국민들의 동의와 지지를 얻는 방식으로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정치과정이 필요하다.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에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정기 여론바로미터조사를 통해 민의에 기반한 대의정치와 책임정치를 구현에 기여한다.

[목차]

1. 세종시 이슈의 특징

세종시 이슈의 특징 : ambivalent and hard issue

세종시 바라보는 여론의 양면성과 유동성

2. 세종시를 보는 가치와 선호의 불일치

정책가치는 원안, 정책선호는 수정안 우세

상충적 가치인식 비율 높아, 아직 정책 지지의 유동성 여지 있어

3. 세종시 3대 쟁점에 대한 국민인식 : 원안과 수정안 변별력 없다

수도권 집중 완화 효과

행정효율성

충청지역 개발 효과

4. 세종시 해법과 정치적 영향

정치권 논란에 대한 피로도 커

원안지지자 국회표결, 수정안 지지자 국민투표 선호

절충 필요성도 세종시 입장 따라 제각각

세종시 영향, 이미지 악화 MB 손해 더 커, 그러나 한나라당 지지층에선 호전 효과

박전대표는 한나라당 지지층에서 이미지 악화 타격, 야성향층에선 개선효과



조사개요

조사일시 : 2월 27일

표본크기 :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800명

표본추출 : 성, 연령, 지역 인구비례에 맞게 표본할당 후 무작위 추출 (가중치 부여)

표집오차 : 95%신뢰수준 $\pm 3.5\%$

응답율 : 12.3%

조사방법 : 전화조사(CATI)

조사기획 : 동아시아연구원(EAI: 원장 이숙중 www.eai.or.kr)

조사기관 : 한국리서치(대표: 노익상 www.hrc.co.kr)

EAI 정기여론조사 연구팀

팀장	이내영(EAI 여론분석센터 소장, 고려대 교수)
연구진	이숙중(EAI 원장, 성균관대 교수)
	전재성(EAI 아시아안보센터소장, 서울대 교수)
	서상민(EAI 중국연구센터)
	이곤수(EAI 거버넌스센터)
	정원철(EAI 여론분석센터)
	정한울(EAI 여론분석센터)

□ 내용문의

EAI 정한울 여론분석센터 부소장(02-2277-1683/018-280-3230/hwjeong@eai.or.kr)

EAI 정원철 여론분석센터 선임연구원(02-2277-1683/017-279-4536/cwc@eai.or.kr)

□ 조사문의

한국리서치 김춘석 수석부장 (02-3014-0082/016-9525-8416/cskim@hrc.co.kr)



1. 세종시 이슈의 특징 : 세종시 바라보는 여론의 양면성과 유동성

세종시 이슈의 특징 : 이슈의 특성과 양면성 고려한 여론분석 시급

세종시 이슈는 양자택일이 쉽지 않은 상충하는 가치가 충돌하는 이슈다. 원안이 내세우는 ‘지방 균형발전’ 및 ‘정치적 신뢰’의 가치와 수정안이 내세우는 ‘행정효율성 및 국가경쟁력’의 가치는 모두 한국 사회에서 중요한 가치로 여겨진다. 이럴 경우 특정입장을 내세우는 정당에 대한 당파성 혹은 특정 이념적 선호를 뚜렷하게 갖고 있지 않거나 그 문제에 경제적 이해관계를 갖고 있지 않는 경우 서로 상충하는 가치 속에서 갈등하게 되기 마련이다. 이러한 상충적 입장을 가진 사람들은 조사시점, 조사에서 부각되는 맥락의 미묘한 차이에 따라 일관되지 않은 응답을 하게 된다는 것이 최근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Alvarez and Brehm 2002; Zaller 1992).

또한 세종시 이슈는 그 특성상 유권자들이 정책 선호를 결정하기 ‘쉬운 이슈(easy issue)’가 아니라 일반인에게 ‘쉽게 입장을 정하기 어려운 이슈(hard issue)’로 분류된다. 일반적으로 상징적 목표나 정책 방향과 관련된 이슈가 쉬운 이슈라면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에 관한 이슈는 일반인에게 어려운 이슈로 분류된다.¹⁾ 세종시는 지방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중요한 가치와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라는 방법론적 문제를 포함하며, 수정안과 원안 각각의 비용편익에 대한 나름의 계산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어려운 이슈임이 분명하다. 이는 전문가들에게도 쉽지 않은 이슈다.

이 경우 대다수 일반 국민들은 정책 자체에 대한 평가보다 이슈와 정책을 주도하는 정당, 지도자에 대한 호감도나 출신지역, 때로는 정책 자체에 대한 평가보다는 정책의 추진방식 같은 비 정책요인을 기준으로 자신이 선택할 정책을 결정하게 된다. 따라서 정책선호를 묻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사실은 정책 자체에 대한 국민인식이라기 보다는 국민들이 정책선택을 위해 활용하는 비 정책적 요인에 대한 인식을 보여주는 것일 수 있다.

세종시 문제의 정치적 해결전망이 불확실해지면서 여론조사 혹은 국민투표를 통해 해결자는 안이 제기되고 있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지만 세종시 이슈가 국민들의 의사를 물어서 해결할 사안인지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하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선호결정이 어렵고 양면적 가치가 충돌하는 세종시 이슈의 경우 국민투표안 역시 정책 자체에 대한 합리적인 평가 대신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재신임문제와 같은 정치적 문제로 변질될 여지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1) 미국의 ‘이슈진화론’ 전문가인 카마인즈와 스티imson의 이슈 분류에 따르면 상징적인(symbolic) 목표(ends)와 관한 이슈(예를 들어 지방분권이나 수도권 집중 육성이나), 오랜 기간 대중의 관심을 받아온 이슈들은 ‘쉬운 이슈’ 분류된다. 반면 최신이슈나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기술적(technical)이고 실질적인(substantial) 수단 및 방법론에 관한 이슈는 ‘어려운 이슈’로 분류된다(Camines and Stimson1980).



2. 정책 가치와 정책 선호의 불일치

정책가치 : 원안의 신뢰우선론이 수정안의 경쟁력 우선론 보다 공감 많아

“국민과의 약속/신뢰우선” 원안 공감 56.4%, “행정효율, 국가경쟁력 우선” 4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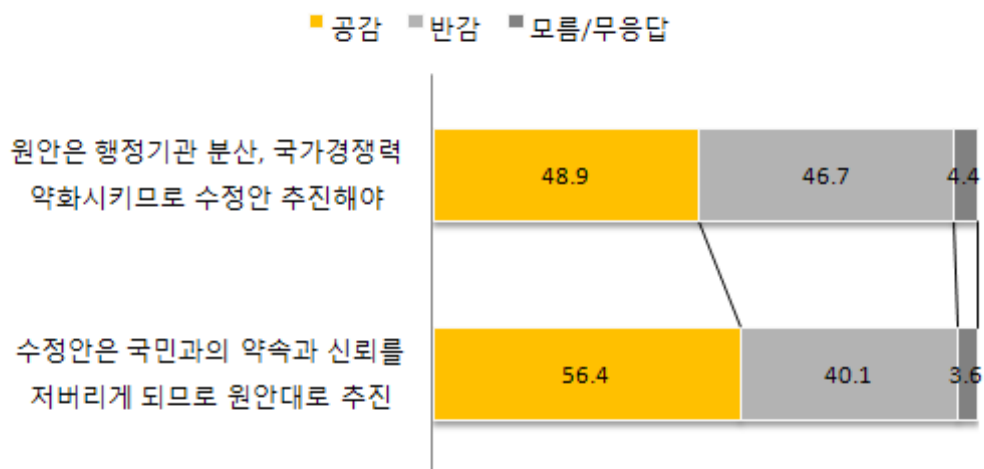
정책선호 : 세종시 추진정책 선호는 수정안 높아

수정안 지지 47.6%, 원안 지지 32.4%, 모르겠다 20.0%

정책가치는 원안, 정책선호는 수정안 우세

수정안에 대한 지지여론이 원안 지지에 비해 다수를 이루었지만 정책이 추구하는 정당성과 가치 차원에서는 원안에 대한 공감대가 컸다. ‘원안은 행정기관을 분산시켜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킨다’ 는 수정안의 논리에 대해 공감한다 48.9%, 공감하지 않는다 46.7%로 양자가 팽팽히 맞서고 있다. 반면 ‘정부의 수정안은 국민과의 약속과 신뢰를 저버리게 된다’ 는 원안의 정당화 논리에 대해서는 56.4%가 공감한다고 답해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 40.1%를 웃돌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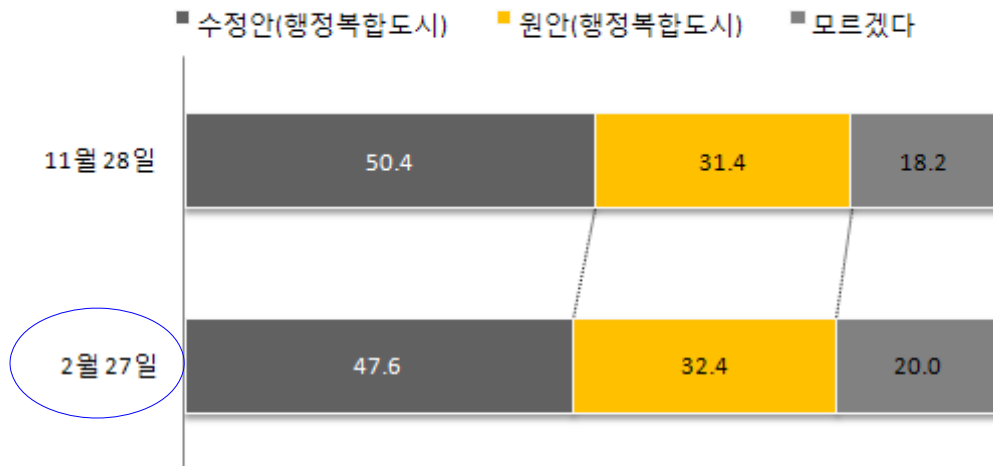
[그림1] 수정안, 원안 정책 가치: 공감도(%)



반면 세종시 정책 선호에 대한 응답비율을 물어보면 수정안 지지는 47.6%, 원안은 32.4%, 모르겠다는 응답은 20.0%로 나타났다. 지난 해 11월 27일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과의 대화를 통해 세종시 수정에 대한 입장 발표와 공식 사과 직후 실시한 정기조사에서 수정안 지지가 50.4%, 원안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31.4%, 모르겠다는 응답이 18.2%였다.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변화라고 할 수는 없지만 수정안이 2.8% 줄고 원안과 모르겠다는 응답이 다소 늘어난 결과(각각 1.0%, 1.8% 상승)다. 설 연휴 이후 세종시 수정안 지지여론의 확산을 꾀했던 정부여당의 기대와는 달리 주춤하고 있지만 여전히 수정안 여론에 대한 선호가 원안에 대한 정책선호를 앞지르고 있다.



[그림2] 수정안, 원안에 대한 정책선호 : 2009년 11월, 2010년 2월 비교(%)



엇갈린 평가는 왜?

정책가치의 차원에서 보면 수정안이 내세우고 있는 행정효율성 및 국가경쟁력의 가치보다 국민과의 약속과 신뢰를 지켜야 한다는 ‘정치신뢰’ 라는 규범적 가치가 국민들에게 상대적으로 공감대가 큰 것을 알 수 있다. 반대로 원안이 내포하고 있다는 행정적 비효율성 문제를 지적하며 수정안이 내세우고 있는 국가경쟁력이라는 핵심 정책가치는 상대적으로 공감대가 적었다. 정부 및 정치권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의 문제는 쉽게 체감되지만 당장 가시적으로 평가하기 힘든 행정비효율성과 국가경쟁력의 가치에 대한 공감이 상대적으로 쉽지 않아 보인다.

더구나 이유야 어찌 되었건 세종시 문제가 이미 여야 정치합의 및 후보시절 현 대통령의 공약 등을 토대로 진행해온 대국민 약속을 뒤집을 경우 신뢰를 훼손할 것이라는 비판에 대응논리를 찾기 힘들다. 진정성에 대한 의문이 지속되는 것은 이 때문으로 보인다. 더구나 대통령의 대국민사과 이외에 정부 및 수정안 추진론자의 신뢰회복과 관련한 추가 노력이 충분치 않아 보이는 것도 가치경쟁에서 뒤지는 이유 중의 하나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정작 정책선호에 있어서는 수정안에 대한 지지가 우세하다. 수정안의 경우 대통령의 세종시 국민사과, 정부안 발표, 설 전후 정부안 홍보가 본격화되면서 수정안의 내용과 정책 효과에 대한 정보가 국민들에게 보다 지속적으로 접할 기회를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 논란은 있지만, 다른 지역에서 역차별 우려가 커질 정도로 세종시 지역 개발을 위한 다양한 정책수단들을 세종시 수정안에 집중 시키는 과정에서 세종시 수정방향과 계획들이 일정하게 확산된 결과로 보인다. 특히 행정기관의 이전이 사실상 수도 분할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우려를 배경으로 수정안에 대한 지지여론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원안의 경우 주로 수정안에 대한 공격 및 방어논리가 정치적 신뢰라는 규범적 문제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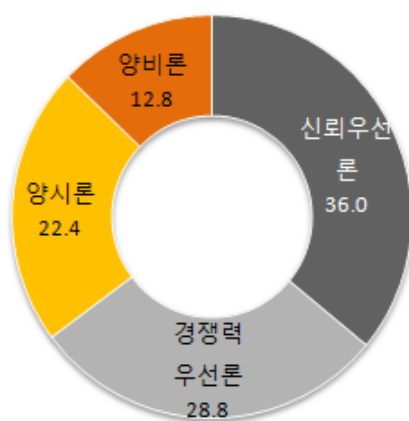


집중되면서 원안의 주요 내용이나 추진계획 등에 새로운 내용이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질 기회가 없었다. 수정안의 구체적인 정책계획들이 발표되고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과정에서 원안, 수정안의 장단점을 비교하며 설득하는 전략 대신 수정안은 일고의 가치가 없다는 원칙적 반대로 대응해왔기 때문에 원안에 대해 알릴 수 있는 기회는 오히려 차단되는 효과가 있었다. 수정안에 대한 여론의 호응이 주춤하고 있지만 이것이 원안에 대한 직접적인 지지로 이어지지 않는 것은 원안 내용에 대한 업데이트된 정보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세종시 가치충돌 :

신뢰우선론 36.0% vs 경쟁력우선론 28.8% vs 양시론 22.4% vs. 양비론 12.8%

[그림3] 세종시 추진 가치 유형(%)



수정안과 원안이 추구하는 정책가치 각각에 대한 공감여부를 기준으로 세종시 이슈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유형화 해보면 국민과의 신뢰를 우선하는 원안 논리에 공감하면서 행정비효율과 국가경쟁력 약화를 막아야 한다는 수정안에 반감을 갖는 ‘신뢰우선론’, 원안에 반감을 가지면서 수정안 논리에 공감하는 ‘경쟁력 우선론’, 두 입장 논리 모두를 수용하는 ‘양시론’, 두 입장 논리 모두에 냉소적인 ‘양비론’ 등 네 개의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조사결과로 보면 신뢰우선론이 36.0%로 가장 많았고, 경쟁력 우선론자가 28.8%였고, 양시론자 22.4%, 양비론은 12.8% 였다. 여기서 두 가치 모두 인정하거나 모두 배척하는 양시양비론을 양면적인 가치 태도가 공존하는 상충적 인식유형으로 보면 열 명 중 세 명은 수정안, 원안 중 양자택일이 아닌 양자 통합, 양자 배척의 상충적 입장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들의 여론 향방이 이후 세종시 여론변화에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Y 수정안 취지 공감
원안의 행정비효율 국가경쟁력 약화 방지

X:원안 취지 공감 국민과의 신뢰 우선	공감	
	II. 경쟁력우선론 (원안 반감/수정안 공감) n=216 전체응답자의 28.8%	I. 상충론자(양시론) (원안공감/수정안 공감) n=168 전체응답자의 22.4%
	반감	
	III. 상충론(양비론자) (원안 반감/수정안 반감) n=96 전체응답자의 12.8%	IV. 신뢰우선론 (원안 공감/ 수정안 반감) n=269 전체응답자의 36.0%
	반감	

* 모름/무응답 제외

세종시 이해관계 걸린 서울과 충청권은 추구하는 가치가 집중
그 외 지역에서는 양시/양비 비율 높아, 아직 정책 지지의 유동성 여지 있어

세종시 논란을 둘러싼 인식유형을 지역별로 보면 현재 세종시 이슈에 지역적 이해관계가 직접 걸린 충청권과 서울지역 유권자들의 경우 특정 가치를 선호하는 비율이 높은 대신 상충적 인식유형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서울지역의 경우 역시 수정안이 추구하는 국가경쟁력 우선론이 44.0%로 다수를 이루었고, 원안이 내세우는 정치신뢰론에 대해서는 27.0%에 그쳤다. 두 가치를 모두 수용(19.5%)하거나 모두 배척(9.4%)하는 상충론적 태도를 가친 응답자는 28.9%로 가장 낮았다.

충청권 주민은 서울지역과는 반대로 정치신뢰우선론이 과반수를 넘어 53.8%였고, 경쟁력 우선론에 대해서는 15.4%에 그쳤다. 상충적 인식이 30.6%로 서울에 이어 두 번째로 낮았다. 그러나 이중에서 두 입장에 모두 공감하는 비율만 보면 28.2%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충청권에서도 세 명은 양 입장 내에서 갈등하고 있는 셈이다.

수정안 여론이 높은 대구/경북 지역에서는 국가경쟁력 가치를 우선하는 여론이 38.2%, 신뢰우선론은 25.0%에 그친 반면, 상충적 여론은 36.8%로 평균을 조금 웃돌았다. 상충적 여론에서 두 가치에 공히 공감을 갖고 있는 양시론적 태도는 22.5%, 두 입장 공히 거부감이 있는 양비론적 태도는 14.5%에 그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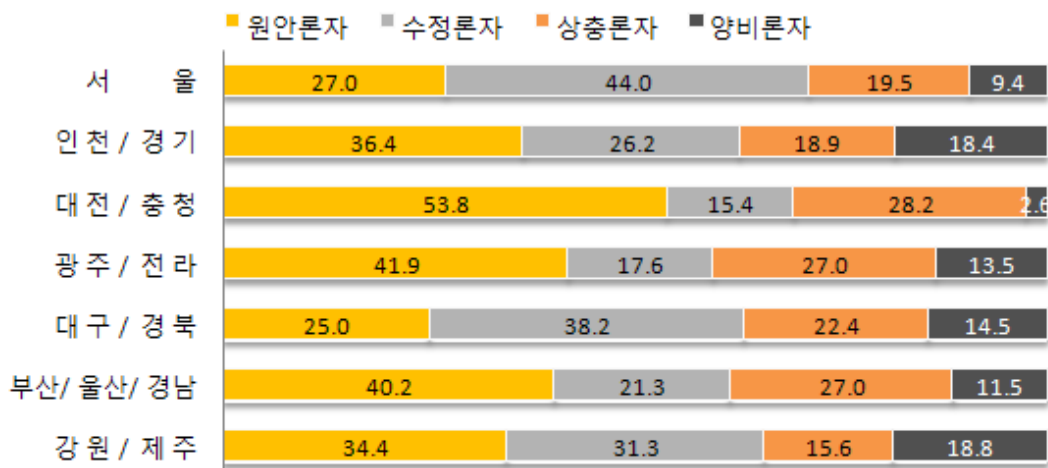


호남 및 PK에서는 원안의 정치신뢰를 우선하는 인식이 41.9%, 40.2%였고, 수정안의 정책가치만을 우선하는 사람이 각각 21.3%, 17.6%로 낮아 충청권에 이어 원안의 정책가치가 우세한 지역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지역의 경우 정치신뢰와 국가경쟁력을 공히 중시하거나 모두 배척하는 상충적 인식론자 비중이 각각 40.5%(양시 27.0%, 양비론 13.5%)와 38.5%(양비 27.0%, 양비 11.5%)로 나타났다. 이들 지역에서 두 입장 모두에 공감을 나타내는 양시론적 입장이 27.0%로 충청 다음으로 높은 지역이었다. 정치신뢰를 우선하는 입장이 다수긴 해도 이처럼 동시에 국가경쟁력을 중시하는 입장이 많다는 것이 가치차원에서는 원안이 우세해도 정작 세종시 추진방안에서는 수정안 지지가 높은 이유를 시사해준다.

경기인천 지역은 서울 유권자들의 가치성향과는 다르게 수정안의 정책가치에 동의하는 비율이 26.2%로 가장 낮았고, 신뢰를 우선해야 한다는 원안 정책가치에 동의하는 비율이 36.4%로 많았다. 경인지역 주민들 중에서는 37.3%로 가장 많은 응답층이 상충적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에서도 양비론 비중이 18.4%로 양시론 입장 18.9%과 비슷할 정도로 많았다. 서울지역이나 충청권처럼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도 아니면서 호남처럼 반 MB정서가 강하지도 않아 세종시 논란에 대한 냉소적 태도의 비중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종합해보면 원안과 수정안이 내세우는 특정 가치에 대해 경도되어 있는 서울이나 충청에서조차도 적지 않은 규모의 양면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응답층들이 적지 않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들의 향방에 따라 세종시 여론은 상당한 변화의 여지가 남아 있는 셈이다. 두 입장 모두에 거부감을 갖는 냉소적 태도가 아닌 두 입장 모두에 공감대 속에서 가치 충돌이 큰 양시론적 입장의 유권자들의 태도변화의 여지가 클 것으로 생각된다. 아직 가치차원에서 여론 변화의 여지는 적지 않게 남아 있는 셈이다.

[그림4] 지역별 세종시 정책가치 유형 분포 비교



* 모름/무응답 제외



3. 세종시 3대 쟁점에 대한 국민인식 : 원안과 수정안 변별하지 못해 지방균형발전 효과 · 행정 효율성 · 충청권 개발효과 차이 없다는 의견이 다수

[표1] 정부/정치권 세종시 입장(논리구조)

	행정중심복합도시안(원안)	교육과학중심 경제도시안(수정안)
목표	수도권 집중완화/균형발전	국가경쟁력 강화/행정효율성 제고
수단	9부 2처 2청 세종시 이전	행정기관 이전 대신 기업, 교육 기관 이 전
정당화	국민과의 약속과 신뢰가 우선	국민들의 수정안 지지 높아
	행정기관 이전 없이 집중완화 및 충청권 개발 불가	막대한 행정비효율 방지 책임이 우선 행정기관 이전 효과 불투명
	수정안은 이미 원안에 포함된 내용	수정안이 개발 파급력 우월
해법	이미 충분한 정치권 논의와 국민에게 동 의 받은 사안으로서 절충 사안 아니다	국가적 사안이며 대통령 사과에 이어 정 부수정안이 나온 사안이므로 수정과 절충 필요
	국민투표 거부	국민투표 고려

정치권에서 세종시 이슈의 논점이 되고 있는 3대 쟁점인, 지방균형 발전에 기여하는 효과, 행정 비효율성, 충청 개발 효과 차원에서 국민들은 각 안을 어떻게 변별하고 있을까? 국민들의 평가는 정치권의 인식과 일치될까? 정치권에서는 각 진영이 자신의 안이 세 차원 모두에서 우월하다고 주장하지만 국민들의 시각은 어떠한가?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세종시 논란의 논리구조를 간략히 정리하면 [표1]과 같다. 수정안과 원안은 목표, 수단, 정당화 논리 및 해결방법 등에 대한 상반되는 논리를 바탕으로 대립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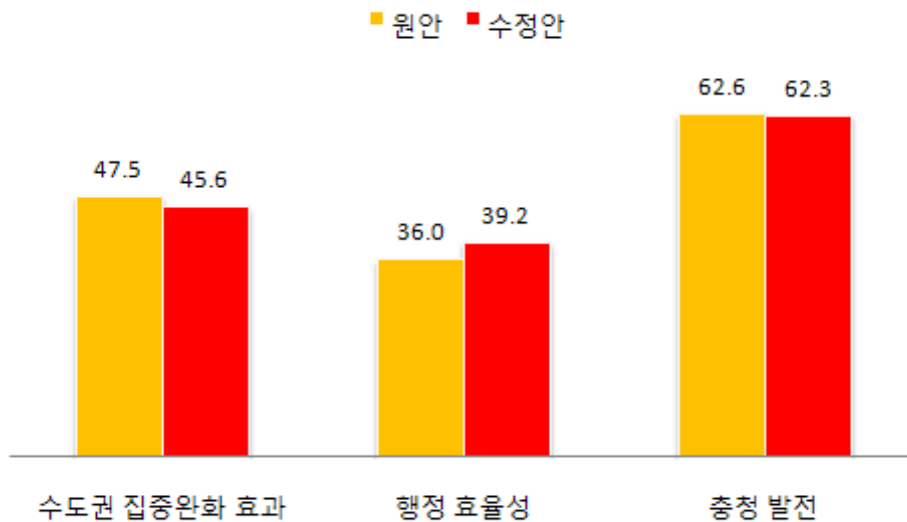
원안과 수정안의 대립되는 논점을 정리하면 크게 (1) 수도권 집중 완화효과 (2) 행정 효율성 (3) 충청권 발전 기여도라는 세 가지 차원으로 요약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 정치권의 논쟁에서 원안이 수도권 집중 완화효과 및 충청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행정기관의 이전이 있어야 수도권 완화효과가 크다고 주장한다. 수정안은 원안의 행정비효율성을 비판하고 수도권 원안 효과도 경제 파급력이 큰 기업, 교육기관을 이전하는 수정안이 우세하다고 주장한다.

쟁점별로 원안, 수정안 각각이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는지 물어본 결과는 다음의 <그림 4>에 요약되어있다. 수도권 집중완화라는 목표에서 원안이 긍정적인 기여를 할 것이라는 응답이 47.5%였고 수정안에 대해서는 45.6%의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반면 행정 효율성 측면에서는 원안에 대한 국민평가가 36.0%에 그쳤고, 수정안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평가는 3.2%가 높은 39.2%에 머물렀다. 충청권 발전에 대한 기여 차원에서도 원안에 대한 긍정 평가 비율은 62.6%, 수정안에 대한 긍정평가 비율은 62.3%였다. 전체적으로 주목할 만



한 점은 국민들이 각각의 차원에 대해 수정안과 원안의 차이를 뚜렷하게 인식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결과이다. 원안이나 수정안 모두 행정효율성 차원에서는 부정적으로 평가하였고, 수도권 집중완화 효과는 상대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지만 긍정적 평가의 비율은 과반수 이하에 그쳤다. 원안과 수정안 공히 충청발전에 긍정적으로 기여를 할 것이라는 평가가 높았고, 그 차이는 크지 않았다.

[그림4] 각 측면별 원안 및 수정안 긍정 평가 : 긍정적이라고 응답한 비율(%)



주) 매우 긍정적, 약간 긍정적, 별 영향 없다, 약간 부정적, 매우 부정적 중 긍정적 응답만 합한 비율

3대 쟁점별 원안-수정안 효과 상대평가

수도권 집중 완화효과 : 원안 우위 34.1, 차이 없다 35.2, 수정안 우위 30.8%

행정효율성 : 원안 우위 27.3, 차이 없다 40.2, 수정안 우위 32.4%

충청발전에 기여 : 원안 우위 28.4%, 차이 없다 47.9%, 수정안 우위 2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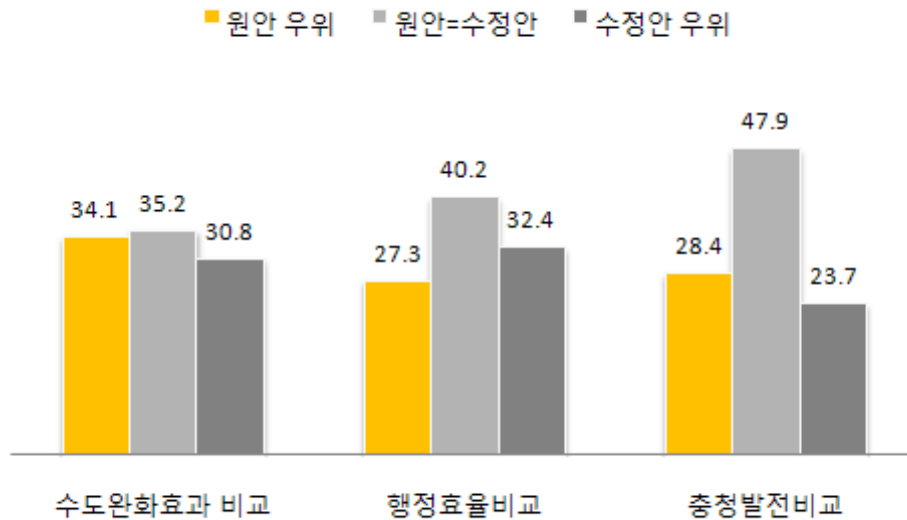
각 쟁점별로 양 입장에 대해 평가한 수치상의 차이를 가지고 상대적인 평가를 해보면 수도권 집중 완화 효과에 있어서는 원안이 낫다는 입장이 34.1%, 수정안이 낫다는 응답은 30.8%로 원안이 오차범위 내에서 조금 높았다. 충청 발전에 대한 기여도에 있어서는 원안이 우위라는 입장은 28.4%, 수정안이 우위라는 23.7%로 미세하게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 효율성 측면에서는 수정안이 낫다는 응답이 32.4%, 원안이 수정안 보다 낫다는 응답은 23.7%로 나타나 원안이 행정의 비효율성을 높일 것이라는 인식이 조금 많았다.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양 입장에 똑 같은 평가 점수를 매긴 층이 다수 여론을 형성하고 있다. 수도권 집중 완화효과의 경우 원안과 수정안에 같은 점수를 준 응답자가 35.2%, 행정 효율성에서도 차이가 없다는 응답이 40.2%로 가장 많았다. 특히 충청권 개발효과에 있어서



는 과반수에 육박하는 47.9%의 응답자들이 원안과 수정안 사이에 차이가 없다고 답해 정부의 수정안이 충청권 개발이익에는 원안에 비해 뒤지지 않는다는 평가를 확산시킨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는 3대 쟁점에 대해 두 선택지가 받은 점수에는 큰 변별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그림5] 각 차원 별 원안 대 수정안 상대 평가 : 양 입장 차이 없어 다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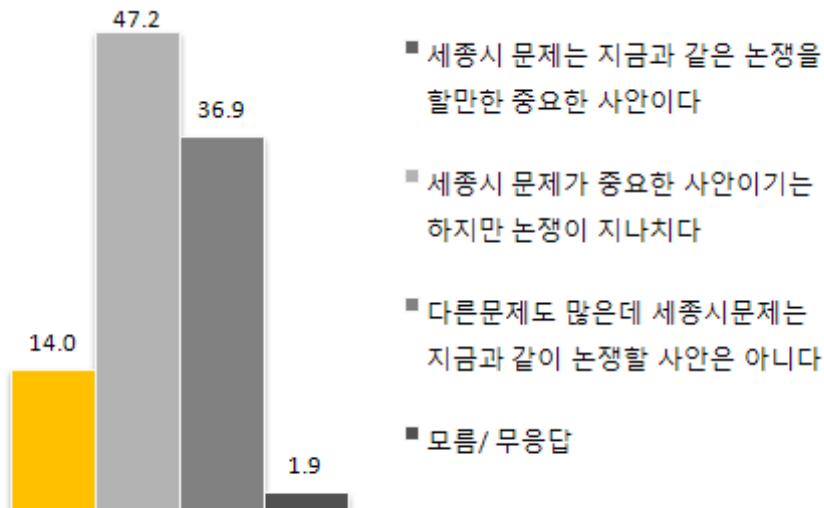
4. 세종시 해법과 정치적 영향

원안과 수정안 인식이 엇갈리는 가운데, 정치권 논란에 대한 피로도 커
세종시 이슈 중요하지만 지나쳐 47.2%, 다른 이슈가 더 중요 36.9%,
지금 정도의 논쟁의 가치 있을 만큼 중요하다 14.0%

세종시 문제는 지난해 정 총리 인준과정에서의 논란을 거쳐 해를 넘겨서도 여전히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 있지 못하고 있다. 특히 정부의 수정안이 마련된 1월 11일 이후 정부와 여당의 주류진영을 중심으로 세종시 수정안 관철을 위한 노력이 본격화되고 이에 박근혜 대표를 중심으로 한 여당 내 친박계열과 야당의 전면적인 반발이 지속되면서 국민들의 세종시 문제를 바라보는 시선이 갈수록 냉담해지고 있다.

국민들은 ‘세종시 문제는 지금과 같은 논쟁을 할 만한 중요한 사안’이라는 입장은 14.0%에 그친 반면 ‘중요한 문제이기는 하지만 논쟁이 지나치다’는 입장이 47.2%로 가장 많았다. ‘다른 문제도 많은 데 세종시 문제를 지금과 같이 논쟁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 36.9%로 현재의 논쟁 양상에 대한 피로감 뿐 아니라 세종시 이슈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냉소적인 태도를 보이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그림6] 세종시 이슈의 중요성과 현 논 의 양상 평가





세종시 해결방안 : 세종시 입장에 따라 해결방안 인식도 엇갈려

국회 표결 20.0%, 국민투표 56.0%, 정부 수정안 포기 1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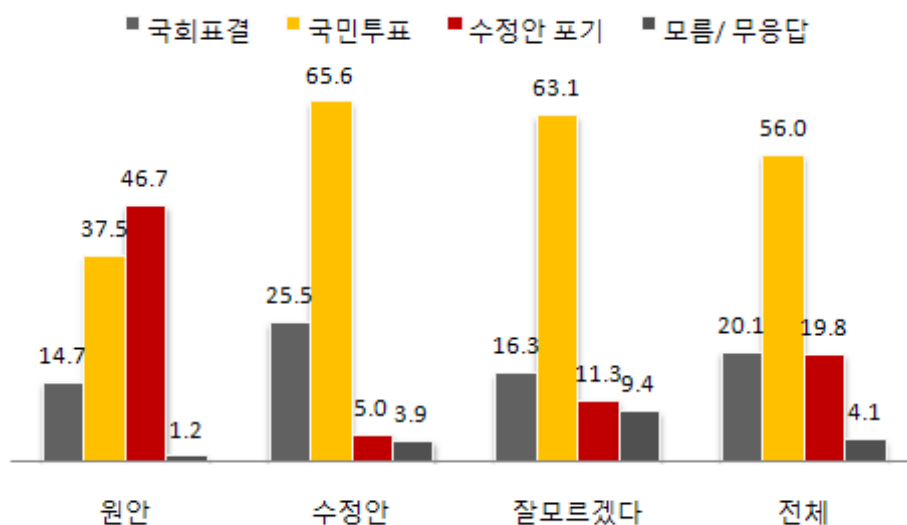
국민투표 방안 : 원안지지자 37.5%, 수정안 지지자 65.6% 찬성

국민 전체적으로는 ‘원안과 수정안을 두고 국회표결을 통해 해결하자’ 는 안이 20.0%, ‘국민투표를 통해 해결하자는 안이 56.0%’, ‘정부가 수정안을 포기해야 한다’ 는 입장은 19.8% 였다. ‘모름/무응답’ 은 1.8%였다.

세종시 정책선호별로 구별을 해보면 원안 지지자의 경우 국민투표 통해 해결하자는 의견이 37.5%로 적은 반면 정부가 수정안을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이 46.7%로 가장 많았다. 국회 표결로 해결하자는 의견은 14.7%였다. 반면 수정안 지지자의 경우 국회 표결을 꼽은 응답은 25.5%, 국민투표로 해결하자는 의견이 65.6%로 가장 많았다. 정부가 포기하라는 응답은 5.0% 였다. 입장을 정하지 않은 층에서도 국민투표로 해결해야 한다는 여론이 63.1%로 많았다.

국민투표 안에 대한 지지가 높은 것은 정치권에 대한 높은 불신이 국민투표로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최근 친이계 일각과 청와대에서도 중대결심 가능성을 언급하며 국민투표의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주목할 만한 결과로 볼 수 있다. 다만 원안 지지자와 수정안 지지자 사이에 국민투표를 바라보는 뚜렷한 시각 차이로 인해 만약 국민투표를 추진할 경우 문제 해결 방법 과정에 대한 논쟁이 또 다른 정치적 갈등 요인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림7] 세종시 해결방안





절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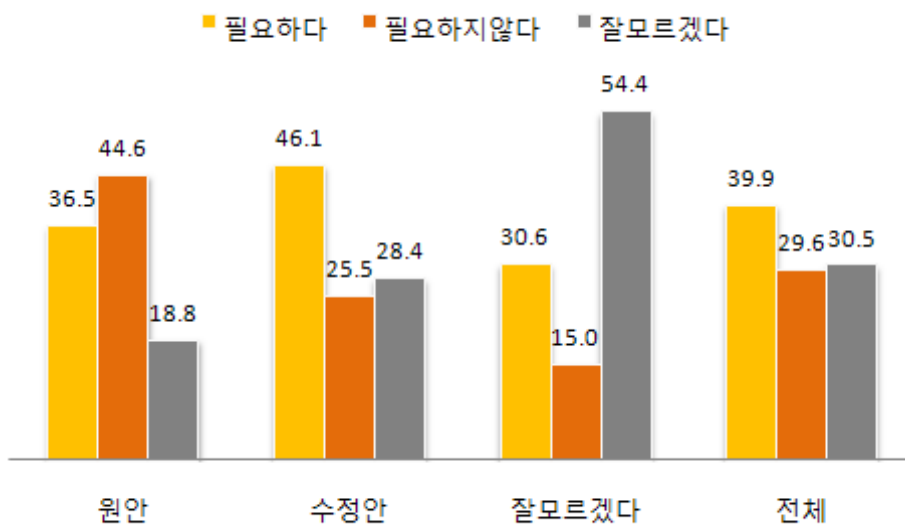
필요하다 39.8%, 필요 없다 29.6%, 잘 모르겠다 30.5%

원안 지지층 필요하다 36.5%, 수정안 지지층 필요하다 46.1%

세종시로 이전할 정부부처 개수를 3~4개로 줄이자는 안, 행정기관 분산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법원 등 독립기관 7개를 이전하자는 안, 아예 수도 이전방안을 마련하자는 안, 다음 대선까지 결정을 미루자는 안 등 다양한 절충안들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한 조사결과는 ‘절충안 논의가 필요하다’ 는 입장이 39.8%, ‘필요하지 않다’ 는 의견도 29.6%, ‘잘 모르겠다’ 는 응답도 30.5%에 달했다.

세종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한 입장에 따라 절충안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도 엇갈리고 있다. 원안 지지자들의 경우 36.5% 만이 절충안이 필요하다고 답하고 44.6%는 필요없다고 답해 절충안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이 많았다. 모르겠다는 응답은 18.8%였다. 반대로 수정안 지지자들은 46.1%가 절충안이 필요하다고 답하고 25.5% 만이 필요없다고 답했다. 28.4%는 모르겠다고 답했다. 원안 지지자 가운데서 절충안에 대해 부정적 인식이 높은 것은 절충안을 수정안의 변형으로 이해하는 친박계 입장과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보인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전체적으로 30%를 넘어섰다는 것은 아직 절충안에 대한 뚜렷한 선호가 정해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내용이나 취지에 대한 정보를 접하지 못한 측면과 그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그림8] 절충안 필요성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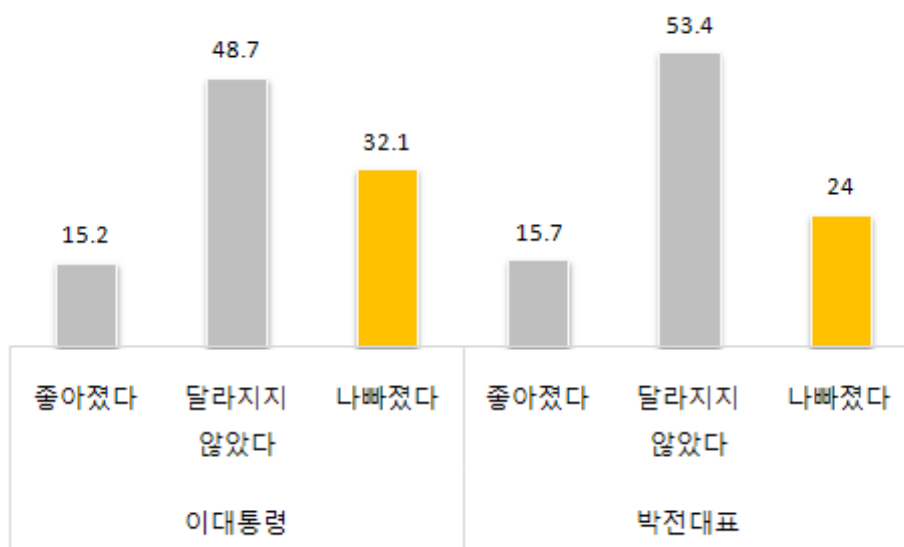




세종시 논란, 대통령 및 박 전대표 이미지 동시 악화, 전체 악화 폭은 MB >朴

세종시 논란이 이명박 대통령 및 박전대표 호감도에 미친 영향을 조사한 결과 이명박 대통령의 경우 좋아졌다는 응답 15.2%인 반면, 나빠졌다는 응답이 32.1%였고, 박전대표의 경우에도 좋아졌다는 응답 15.7%, 나빠졌다는 응답이 24.0%로 나타나 세종시 논란이 공통적으로 이대통령과 박전대표에 대한 국민들의 이미지를 악화시킨 것으로 조사되었지만, 상대적으로 이명박 대통령의 이미지 악화 비율이 컸다.

[그림8] 세종시 논란 이후 이 대통령, 박 전대표 이미지 변화



주) 모름/무응답은 표기하지 않음

이 대통령 한라당 지지층에선 이미지 개선, 무당파 층에서 이미지 악화

정당 지지별로 세종시 논란에 따른 이대통령과 박근혜 전대표의 이미지 변화를 살펴보면 이명박 대통령의 경우 한나라당 지지층에서 좋아졌다는 의견이 35.5%, 나빠졌다는 의견은 12.2%에 그쳐 한나라당 지지층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늘어났다. 반면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좋아졌다는 의견이 6.3%, 나빠졌다는 의견이 42.4%로 나타났다. 정당 지지가 없는 무당파 층에서도 좋아졌다는 의견은 6.8%에 그쳤지만 무당파 층에서는 33.7%가 나빠졌다고 답해 세종시 문제가 집토끼라고 불리우는 핵심 지지층 결집에는 도움이 된 반면 지지 외연을 확대하는 데는 부정적 효과가 있음이 확인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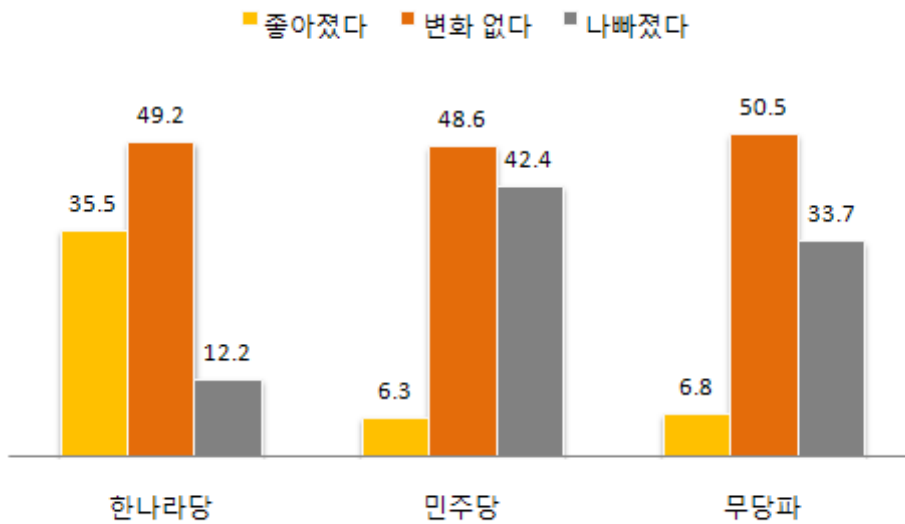
박 전대표 민주당 지지층 개선, 한나라당 지지층에서 악화

한편 박근혜 전 대표의 경우 이명박 대통령과는 달리 한나라당 지지층에서는 개선되었다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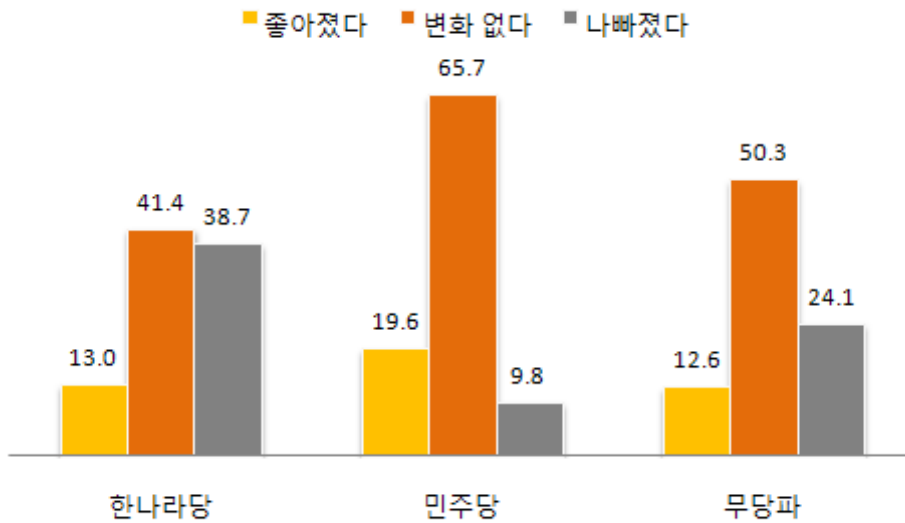
응답이 13.0%, 나빠졌다는 의견이 38.7%에 달한 반면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19.6%가 좋아졌다고 답하고 나빠졌다는 응답은 9.8%에 그쳐 긍정적 효과가 있었다. 무당파 층에서는 좋아졌다는 의견이 12.6%, 나빠졌다는 의견은 24.1%로 박대표 역시 무당파 층에서 전체적으로는 이미지가 나빠졌다는 비율이 좀 더 높았지만, 이명박 대통령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고 할 수 있다.

[그림9] 정당지지별 이명박 대통령 이미지 변화



주) 모름/무응답은 표기하지 않음

[그림10] 정당지지별 박 전대표 이미지 변화



주) 모름/무응답은 표기하지 않음